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김현아 김현아 변호사 사무소 대표

I. 들어가며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면서 다시 한 번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알려졌다. 하지만 그동안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의 공백으로 인해 무죄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고,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으면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 및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더 높아졌다. 이에 20대 국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법들의 제·개정이 이루어졌다. 다음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들의 주요 제·개정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 앞으로 남은 개선과제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II. 주요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의 제·개정 현황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용어 변경(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기존 법에서 사용되었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이라는 용어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마침내

변경되었다.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인식과 당위성의 반영은 법률조항에도 필요하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는 표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변경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음란물’과 관련된 범죄가 아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관한 죄형량 강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광고·소개, 구입·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제11조).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지속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사건의 발생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활발해졌다.

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하고, 실질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규제하기 위해 광고·소개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법정형 상향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으로, 이러한 개정을 통해 향후 국민들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처벌 강화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벌금형이 기존 “500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이하로 상향되어 지나치게 낮게 규정되어 있던 기존 법정형 부분이 시정되었다.

나.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강화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신설 2020. 5. 19.)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심각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미약한 처벌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이 반영되어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하여 법정형이 전반적으로 강화되었다. 또한 상습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가중처벌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

다. 소지죄 신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20. 5. 19.)

불법촬영물 유포의 폐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유포자를 처벌하는 외에 이를 소지, 시청한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있어왔는데, 2020. 5. 19. 개정으로 촬영물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었다.

라. 허위영상물등의 반포 등 처벌 신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신설 2020. 5. 19.)

[본조신설 2020. 3. 24.]

불법 ‘촬영’물과는 달리 ‘편집’등의 경우는 기존 성폭력처벌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 가해자가 성폭력 처벌법으로 처벌되지 못하고 정통망법상 음란물이거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어 왔다. 그러나 가해자가 성폭력처벌법으로 규율되지 않는다면 수강명령 등 성폭력 범죄 관련 제재 조치를 할 수 없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술의 발달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합성, 편집, 가공, 특히 딥페이크 피해도 확산되면서 성폭력처벌법에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 이러한 편집물·합성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 등을 한 자, 편집·합성·가공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그 편집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성폭력처벌법에 마련되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러한 죄를 범한 자, 상습으로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되었다.

마.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신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불법촬영물 피해자들은 촬영물을 이용한 가해자의 각종 협박에 시달리는 등, 피해자에 대한 다른 범죄의 가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기존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촬영행위와 유포행위만 처벌하고 있어서, 이와 별도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었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가 신설되어 협박·강요에 대해서도 향후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범죄수익등의 추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을 산정할 때에는 범죄행위를 한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취득한 재산이 범죄수익등의 금액 및 재산 취득 시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같은 조의 죄를 범하여 얻은 범죄수익등으로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으로 추정한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의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의 죄

[본조신설 2020. 5. 19.]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경우 범죄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개별 범죄사실의 특정 및 개별범죄와 범죄수익 간 관련성 입증에 어려워 범죄수익환수가 좌절되는 경우가 발생하

고 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배포 등의 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의 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에 관한 입증책임을 완화함으로써 범죄수익의 보다 원활한 환수에 기여하려는 것이다.¹⁾

4. 전기통신사업법

가. 유통방지조치의무,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 조항 신설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 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9.〉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 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0. 6. 9.〉

디지털 성범죄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인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무분별한 유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유통방지 조치 및 기술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관한 위헌법률 제청심판 사건에서, 동 조항을 통하여 달성되는 공익이 서비스 이용자의 통신의 비밀이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적불이익보다 크며 이러한 사적불이익에 대하여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비밀유지의무등을 부과하는 별도의 법령을 통하여 보장함으로써 대처할 문제라고 보아, 동 야청법 조항에 의해 통신비밀이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6헌가15)고 판시하기도 하였다.

1)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8109&lsId=&efYd=20200625&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나. 제재조치 신설

제22조의6(유통방지 조치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치의무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조치의무사업자 및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9.]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말한다)을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을 명하여야 한다.

3의4.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3의5.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2조의5 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①항에서 3의4, 3

의5를 신설하여 위반시 사업의 폐업, 등록 취소, 사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부과된 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계속 개선 보완하여야만 불법촬영물의 유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7의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의 개발·보급

제5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이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②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업무를 수행한다.

③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수 및 자격요건,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에 대한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9.]

기술의 발전과 함께 거짓으로 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보의 거짓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가 이를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하는 시책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의 개발·보급’을 포함하도록 하였다(제4조제2항제7호의2 신설).

또한 불법촬영물의 유포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성폭력처벌법이나 아동법에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 이외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속한 접속 차단과 삭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국내 사업자가 아닌 해외사업자라는 이유로 국내법을 적용하기 어려워 법과 제도 적용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법을 적용(제5조의2)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였다.

Ⅲ. 개선 과제

1. ‘성적 수치심’ 표현 삭제

그동안 이루어진 성폭력처벌법의 개정 논의 과정에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오던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수치심’ 용어의 삭제는 여전히 개정되지 않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감정을 드러내는 하나의 표현으로 성적 수치심이 사용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성폭력 처벌과 관련된 구성요건으로 규정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수치심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들을 볼 낮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 또는 그런 일로 인해 느끼는 마음’이다. 심리학에서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결점이 있는 사람으로 바라본다고 판단할 때 발생하는 정서’를 의미한다. 이것이 수치심의 정의라면 이는 가해자가 느껴야 할 감정이다. 성폭력과 관련된 처벌조항이 과거에 형법의 ‘정조의 죄’ 장에 위치해 있었던 것처럼 성폭력 범죄가 여전히 순결과 정조의 문제로 여겨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폭력 문제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통념을 재생산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입법 개선 방안으로, 먼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구성요건의

해석 논란이 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은 삭제되어야 한다. 대신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가해자의 침해행위를 중심으로 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²⁾

2. 온라인 그루밍 처벌 도입

온라인 공간에서 아동, 청소년과의 만남에 대하여 목적을 불문하고 아동, 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를 하거나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음란행위를 하는 등의 행위에 개입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에게 추후에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성 범죄를 막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성적인 행동 등으로 나아가기 전에 그럴 고의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선물이나 재정적인 지원 등을 받고 이에 ‘길들여져서’ 결과적으로는 애초에 의도한 대로 성행위를 하게 된다면 이를 과연 완전한 동의 또는 합의에 의한 성행위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³⁾. 성인이라는 우월적 지위와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아동의 정신과 육체를 조종하는 ‘그루밍’은 성범죄라는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그루밍 성범죄자에 대한 수사, 기소, 그리고 엄격한 처벌 및 피해자 지원 등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재 이와 관련된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기도 하다. 즉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유인·권유하는 행위만을 처벌할 뿐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으로 접근하여 대화하거나 성적 목적의 유인·권유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이러한 성적 목적의 유인행

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성매수 등 심각한 성착취 범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범죄행위로 처벌할 필요가 있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를 구체화하여 처벌하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개정안이 제출되었다.⁴⁾ 향후 국회에서 이에 관한 활발한 논의를 통해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3. 삭제 명령 명문화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가해자가 촬영물 등을 무한 복사, 소지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진정한 삭제 여부에 대해 영구적인 불안상태에 놓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촬영물 등의 사후 처리가 피해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조치의무가 가해자에게 부과될 필요가 있다.

현재 법원에서 압수물 폐기는 「형사소송법」 제130조에 따라 가능하나, 이와 더불어 판결에서 직접 가해자에게 삭제명령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가해자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법률에 삭제명령을 규정함으로써 그 후의 가해자의 재유포 행위에 대해 민사상, 형사상 처벌도 용이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이 부수처분으로 삭제명령을 의무화하는 개정안 마련이 필요하다. 즉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김현아(2017),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논문, 73-75 참조.

3) 윤정숙, 이태현, 김현숙(2019),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그루밍의 특성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19면

4)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권인숙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2020.6.11.)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2FOX0X6Q1V1X1H0B1Z2F2X8Q7K6P0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에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촬영물 등에 대하여는 삭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가안)’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⁵⁾.

4. 촬영물 ‘이용’ 범죄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서는 촬영물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행위에 대해서만 처벌규정을 도입하였다. 생각건대 N번방 사건등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촬영물등을 이용하여 협박하고 음란행위를 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되었던 대표적인 가해행태가 협박, 강요행위였기 때문에 본 조항이 신설되었다고 여겨지고, 본 조항의 도입 의미는 매우 크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협박, 강요외에도 사기, 공갈 등의 다양한 범죄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또 이러한 범죄 행위들이 서로 혼재되어 있기도 하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 등을 ‘이용’한 범죄 행위를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것이 그 입법취지라면, 과연 협박, 강요로만 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더 추가적인 입법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 디지털 성범죄 특성을 반영한 양형기준 마련

앞서 본 바와 같이 디지털 성범죄 관련 규정들에 새로운 처벌규정의 도입이나 전반적인 법정형이 상향되는 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법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노력이 필

요하다. 그 중 하나가 양형기준의 마련이다.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중으로, 2020. 9. 19. 양형기준안을 발표한 후 차후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청회등을 통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향후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는 양형 기준표의 마련이 절실하고, 특히 피해가 무한 확대되고 그 피해 회복이 극히 어렵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된 엄중한 양형기준이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IV. 나가며

20대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들이 제, 개정되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안을 만들고 있는 등,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개입하기 위한 법과 제도들이 점차 진일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도 디지털 성범죄의 수단과 방법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의미에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도 보듯이 수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단순하게 불법 영상물을 촬영, 공유하는 것을 넘어 함께 제작, 유포까지 하고 있고 오프라인의 범죄로도 이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관련 법과 제도들은 가해자의 처벌에 공백이 생기지 않고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김현아외(2018),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지원 방안 연구, 국회여성가족위원회, 90면.